

<표지디자인 별도>

한국사회에는 인종차별이 없나요?
-인종, 인종차별, 성·인종차별 알아보기-

2010년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목차

1부 | 개념 보기

인종이란? / 인종주의란? / 인종차별이란? / 국제인권법에서는 인종차별을 어떻게 규정하나? / 인종차별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 / 성·인종차별이란? / 새롭게 되살아나는 인종주의

2부 |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나요?

인종주의는 서구에만 있는 것인가? / 인종주의는 조선과 한국에 어떻게 유입되었나? /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착각 / 한국에서의 제도적 인종차별이란? /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 /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인종주의란? /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지침 / 정리 :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3부 | 성·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함께 걸음

일상의 성·인종차별 알아보기 /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은 어떻게 금지되나? /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가? /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성·인종차별 반대 공동행동의 취지

[부록] 2001년 더반 행동계획 요약

들어가며

지난 5세기 동안 유럽인들이 전 세계적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념은 인종주의였다. 곳곳에서 원주민들을 멸종시키고 과거 독일과 일본 등에서 일어났던 광기의 이면에도 인종주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언뜻 이와 무관한 듯 보이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인종차별과 인종주의 코드가 넘쳐난다.

인종주의는 사람을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으로 나누고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다스리거나 차별하는 것이 괜찮다고 믿게 하는 이념이다. 인종은 허구임에도 인종주의는 가혹한 실재이며 그래서 사람들은 인종을 실재로 착각한다. 그 피해와 환각효과, 침묵효과는 지대하다. 한국 사회의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관통하는 노골적인 백인승배가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종주의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그런데 과란불로 착각하는 중이다. 인종주의는 서구백인사회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경찰과 법원 등 한국정부기관에서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모습은 매우 느리며 소극적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며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가해자들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인종차별 문화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주류문화에서는 다양한 ‘인종차별’ 기호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주민에 대한 경제 논리나 문화적 차이를 방패막이 삼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인종차별과 무관한 문화적 선호로 위장한다. 특정 종교나 폭력적 체질에 대한 거부로 정당화된다. 싫은 걸 좋아할 수 없지 않느냐고 강변되며, 겉모습과 풍습이 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왜 하얀 피부색과 그런 사람들의 외모, 그런 사람들의 언어와 생활방식, 소비만을 문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수많은 ‘다름’을 왜 곧바로 혐오와 거부로 연결하는지 묻지 않는다. 이런 교육과 제도의 뿌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차별의 면죄부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종주의라는 빨간불은 사고를 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신호등이다. 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질주하면 사고가 넘쳐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는데 기득권층은 약자의 곤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요구를 분쇄하는데 몰두한다. 특정한 외국인 집단을 혐오하고 범죄집단화하고 나아가 열등한 집단으로 규정하려는 여러 움직임들 또한 심상치 않다. 여기에 순수혈통에 대한 환상, 그 뒤에 숨은 여성비하와 가부장제,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백인승배가 존재하기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인종주의가 자가발전하면서 성차별과 결합하는 토양이다.

이 소책자는 교차로의 충돌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준비되었다. 앞으로 성·인종차별금지를 제도와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널리 활용된다면 그러한 바람이 조금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권단체와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며 연구자들의 더 많은 조사와 글쓰기, 그리고 인종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시급한 것은 정부와 언론 종사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공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인종차별문제를 포함하는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양심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종’이라는 기호로 업신여겨지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받고 시민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1부 | 개념 보기

인종이란?

인종은 실체가 없는 상상이다. 근대에 들어와 서양인들이 인종이라는 말을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혼란스럽게 사용했다. 민족을 의미한 경우도 있고 유대 인종이라는 말처럼 종교적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신체나 용모의 특징에 따라 나누는 구분의 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인종을 보통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세 형태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신체나 골격, 용모의 특징이 인간 집단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생물학에서 종은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계선을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러한 생물학적 구분이 없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인종이라는 관념을 적용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 어불성설이다.

그런 인위적인 구분에 의해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최근에도 혈액 성분이나 출신 민족, 유전자 등 여러 다른 기준들이 더 추가하고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에 따라 수십 개의 인종으로 나누기도 하나 근거가 없는 것이며 정확하지도 않다.

인종주의란?

이렇게 불분명하며 인간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정하는 인종 개념 위에 서 있는 이념을 인종주의라고 한다. 인종주의는 대략 몇 가지의 공통적인 믿음에 기초해 있다.

- **인종이 다르면 사람도 다르다** 인간은 공통의 신체적 특질을 가진 다른 인간집단인 인종으로 나뉘는데 서로 다른 인종 간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있다.
- **인종적 특성은 유전되며 피 속에 있다** 신체적 특성이 다르면 정신적 특성도 다르며, 이는 유전에 의해 후대에 대부분 전달되므로 교육이나 다른 환경이 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 **인종은 개인을 초월하고 개인을 결정한다** 개인의 행위나 성향은 그가 속한 인종적 집단에 따라 결정되거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인종에는 위아래가 있다** 인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우열이 있다. 이는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지적, 도덕적 특질의 우열로 나타난다.
- **열등한 인종은 다른 인종과 평등하지 않다**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불평등하게 대우하거나 멸시, 예속화하는 것은 정당하다.

※ 인종의 발명

현대의 “인종 race” 이라는 개념은 1684년에 프랑스 의사 프랑스와 베르니에가 인체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부색을 지칭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다. 그 후 린네가 인류는 인종적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 [자연의 체계](1735)가 인종에 관한 권위 있는 저서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인종은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비유럽인들을 격하하고 열등화하기 위한 지적 언어적 작업으로 유럽의 세계정복을 위한 인위적 발명이었다. 유럽에서 17·18세기에 인종주의적 민담, 신화, 전설, 이야기들의 확산되면서 일반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인종적 세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생물학에서 종 race은 교배하여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계선을 지칭한다. 인류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허구인 인종에 근거한 세계관과 생각은 인간의 평등보다는 차별에 봉사하게끔 되어있다.

인종차별이란?

인종차별은 허구인 ‘인종’을 핑계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부색이나 출신국가처럼 ‘인종’과 관련되는 것으로 믿어지는 차이를 이유로 하여, 직업이나 학업, 일상생활과 공공기관의 업무 영역 등을 막론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인종’에 기초한, 또는 ‘인종’이 언급된 차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법상 가장 권위 있는 인권 기구인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는 “인종, 피부색, 출생, 민족적 또는 종족적 기원”에 기초한 차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 이 협약의 해석에 따라 원주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 역시 인종차별에 속한다. 그 이유는 인종이 객관적 표식이 아니라 피부색이나 출신과 같은 다른 표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즉 차별 대상이 구체적인 인종집단이 아니더라도 인종차별은 발생한다. 차별 대상자의 출신 국가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그의 종교에 혐오감을 갖고 있을 때, 그 국가와 종교에 인종적 비하를 가하면서 인종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종차별은 기존의 차별구조와 결합하고 여기에 인종주의적 편견과 태도가 덧붙여지면서 발생한다.

인종은 허구이지만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실재한다. 이렇게 잘못된 관념과 이념인 인종과 인종주의에 기초한 차별을 인종차별이라고 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차별의 형태이고 국제상황과 일국 상황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과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 인종차별은 점점 더욱 새롭게 이해되고 있다.

은근한 인종차별도 매우 심각하다. 광고나 언론에서 <좋고 선진적인 것 = 백인 또는 서구사회>, <안 좋고 후진적인 것 = 흑인 또는 빈곤한 사회>로 연관시키는 이미지 공학과 문화 역시 심각한 인종차별에 해당된다.

‘우리 민족’을 우대하는 것도 인종차별에 해당된다. 허구적인 ‘인종’을 이유로 ‘우리’라고 생각되는 집단에게 특권이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인종차별에 해당된다. 차별의 반대는 우대가 아니라 평등이기 때문이다.

살아 꿈틀거리는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새롭게 되살아난다. 여러 종류의 차별이 중복된 다층적이고 심화된 차별로.

국제인권법에서는 인종차별을 어떻게 규정하나?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규정하는 인종차별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기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 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001년 더반 선언문 및 행동계획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 문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나 민족 등을 이유로 발생하며 그 피해자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기타 지위 등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다층적 또는 심화된 형태의 차별을 받는다.

2000년 유럽연합 <인종평등지침>

제2조 (차별의 개념) 1. 본 지침에서 평등대우의 원칙이란 인종이나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이 없는 것을 뜻한다.

2. (a) **직접적 차별**이란 인종이나 출신민족을 이유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람이 받거나 받았거나 받았을 대우에 비하여 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인정되고,

(b) **간접적 차별**이란 외견상으로는 중립적인 규정, 기준, 관행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민족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비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인정되며...(중략)

3. **괴롭힘**이란 인종이나 출신민족과 관련한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모멸적, 굴욕적, 억압적 분위기를 조장할 의도를 가졌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중략)

인종차별에는 어떤 형태가 있나?

인 종차별은 개인적 인종차별, 제도적 인종차별, 문화적 인종차별, 성차별과 결합된 성·인종차별 등 기존 차별구조와 중첩된 인종차별 등 대략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인종차별은 ‘인종’으로 인식되는 표식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열등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언행에 의도를 가졌는지 아닌지, 의식적으로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종’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감각에 영향을 받은 태도와 언행을 의미한다.

제도적 인종차별은 정부, 법원, 경찰, 기업, 노조, 학교, 종교기구 등의 정책이나 관행 또는 제도에서, ‘인종’ 표식에 따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거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 주택 정책, 주거지 형성 경향, 분리된 학교, 차별적 고용이나 승진, 인종별 분류, 의료보건 서비스의 등급화, 분리된 종교 기구, 소수집단의 역사와 문화, 특성을 무시하는 교육 등.

문화적 인종차별은 한 집단의 문화와 문화적 유산이 다른 집단의 문화와 유산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포함되는 개인과 제도의 표현을 말한다. (예) 예술, 공예, 언어, 전통, 믿음체계, 가치 등.

성·인종차별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강력한 결합

인 종차별을 받는 집단의 여성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는다. 인종화된 집단과 가까이 있거나 그 집단과 친한 한국인 여성은 특별한 차별과 시선을 접한다. 인종화된 소수집단의 여성의 경험 그리고 한국 여성의 경험은 젠더와 인종이 중첩된 이중억압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은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공통기반을 갖고 있다. 두 차별은 차이와 불평등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즉 인종주의는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의 존재를 자연적인 것으로, 성차별은 남녀의 우월관계를 자연적인 것으로 전제한다.

인종주의는 가부장제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인종주의에서는 인종에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또는 신체특징적인 원천이 있다고 간주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고향, 뿌리, 조상은 부계 중심으로, 즉 가부장적으로 기억되고 인식된다.

인종주의와 가부장제는 모두 인간에 뿌리가 있으며 이 뿌리는 부계 혈통, 즉 아버지의 피에 의해 결정된다는 허구적 상상에 기초해 있다. 이런 면에서 뿌리-조상-가부장제는 인종주의와 상통한다. 인종주의는 여러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갖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형불가능한 뿌리, 즉 생물적 기원을 분석의 최종 근거로 삼는 강한 특징을 갖

는다. 그런데 이러한 핏줄과 뿌리에 대한 상상은 전적으로 젠더차별적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와 가부장제, 인종주의와 성차별이 서로 절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롭게 되살아나는 인종주의

2 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유대인 학살의 기억과, 유엔 등의 노력에 의해 인종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남아프리카연방에서는 도시에서 흑인과 백인의 주거지역에 철조망을 통해 따로 나눌 정도로 심한 인종차별정책을 썼다.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1960년대의 민권운동을 통해서야 흑백차별이 겨우 사라졌다.

한동안 주춤한 듯이 보이던 인종주의는 1980년대 이후 다시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 1980, 90년대에 들어와 세계 경제사정이 나빠지며 유럽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증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이 과거의 식민국가였거나 수백만에 달하는 이민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의 경우 심하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파 정당이나 단체들이 공공연히 외국인 추방 등을 외치며 이미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이나 비백인들에 대해서 인종주의적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폭력행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인종주의가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부딪쳐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국에서 나타나는 인종주의는 아직까지는 문화적 인종주의의 단계로 보이

지만 언제든지 생물학적 인종주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며 경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강철구)

※ 새로운 인종주의의 특징

■ 제도적 인종주의와 문화적 인종주의의 측면이 확대되고 이주민에 대한 경제 논리를 방패막이 삼아, 차별 대상에 대해서 은근하거나 간접적이며 의도를 담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행위 당사자가 쉽게 인종차별을 했다고 인식하거나 느끼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집단이 사람들이 열등하다는 정서 또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표현은 간접적으로 서구 백인사회의 문명적, 경제적, 선진성, 지적 우월성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 차별 대상이 사회 저변에 억압된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인종’ 표식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의 평상 상태에 양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지위나 영향력이 높아질 때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예: 기본적 인권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과 인종주의)

■ 개인들의 인종차별적 언행이나 편견이 제도의 작용에 따라 증폭된다. 즉, ‘인종’ 표식 집단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나 제도가 적용될 때 이를 사회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인종주의가 함께 증폭된다.

(출처: 박경태, [인종주의])

2부 |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구요?

인종주의는 서구에만 있는 것인가?

근대 인종주의는 서구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식민지 극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구 식민지 사회에도 강하게 자리잡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노골적인 인종주의적 사고방식과 표현을 언론과 사회 지도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제어나 비판이 없는 사회 조건에서 인종주의는 쉽게 주류문화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종주의는 서구가 비서구를 바라보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서구를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 혹은 사회가 열등한 타자를 만들어 낼 때도 사용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서구 따라잡기>, <백인 숭배>의 이념에 인종주의가 배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종주의 발언과 표현의 예

■ 2010년 3월 20일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제주도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자연이 있다.”

그게 관광 명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서 그냥 무식한 감...; 흑인들만 뛰어 다니는 그런 곳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제주의 소리>

■ 모 일간지, 아프리카 출신 빅리그 축구선수들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떠오르는 아프리카] 유연성 뛰어난 ‘검은 표범’들 세계축구 호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림 (다른 피부색을 가진 다른 훌륭한 축구선수들이 ‘하얀 표범’이라던가 ‘노란 말’로 묘사되지 않는다.)

■ 한국의 모 대통령, 2010년 인도네시아 교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것은 세계 최고인데, 어떤 것은 아프리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됨. (아프리카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배태한 평등한 교류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의 최하의 기준, 되어서는 안 되는 금지의 기준으로 사용됨)

■ 2010년 한 통신회사의 영상 광고: 가족 전화료 고지서를 보고 분노하는 아버지가 괴성을 지르고 동물처럼 울부짖는 ‘흑인’으로 묘사. 인종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앞으로 튀어나온 턱, 납작하고 큰 코 등 두개골의 형상을 사용함.

■ 이와 대비되어, 한국 언론에서 백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영유아 위해 헌신한 ‘푸른 눈의 천사’ 000 선교사”

“푸른 눈 의사들의 천사같은 ‘인술’”

“소록도에 찾아온 푸른 눈의 천사”

“푸른 눈의 천사들과 초록세상을 만든다”

“비운의 체조 스타 지키는 푸른 눈의 천사”

“천사들의 합창: 빈 소년합창단 공연”

인종주의는 조선과 한국에 어떻게 유입되었나?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근대화 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위해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역시 서구와 같은 방식으로 조선에 들어온다. 바로 이 시기에 유럽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인종주의였다. ‘다른 것에 대한 혐오’라는 본능적인 감각을 기반으로 했던 유럽의 인종주의는 19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생물학의 발달과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우생학의 출현과 더불어 경제력, 군사력의 뒷받침, 나아가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모두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돋움하려 했던 일본이 했던 일은 유럽의 인종주의를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스스로 유럽인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려는 것이었다. 일본이 제국의 야욕을 키우던 1880~90년대 사이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혈통에 대한 담론이 등장한 것은 따라서 자연스럽다. 일본인의 순수한 피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는, 그리하여 유럽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이나 중국인과의 혼혈 역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순혈주의가 등장했다.

이 담론의 종착점은 순수한 피를 지킴으로써 국력의 증강을 꾀하는 것, 이를 통해 우수한 일본인들이 열등한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혈통과 인종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는 방식 역시 이 점에서 흥미롭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던 시기에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민

족주의였는데, 한국의 민족주의가 저항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인종주의 담론이었던 것이다. 단재 신채호는 국가를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로, 역사 역시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으로 정의한다.

이 과정에서 신채호는 한민족을 “단군의 후손”인 “신성한 부여족”으로 규정하면서 “피가 다른 자”들을 역사에서 되도록 지워야 한다는 순혈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윤치호가 평생 영어로 일기를 쓰고, 이승만이 감옥에서 영어사전을 만들게 되는 맥락도 여기에 있다. 흑인이 왜 백인에게 지배당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양의 인종주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흑인의 운명을 겪지 않으려면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지식인들도 소수가 아니었다.

요컨대 한국적 인종주의의 기원은 제국주의 위기상황 속에 처한 지식인들이 서구 열강에 대해 느꼈던 열패감이었다.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구한말의 지식인들은 적극적으로 인종주의의 논리를 체화했고 이것이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와 결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인종주의 기원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배의 문제, 생존과 승리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배당하는 자들의 분노가 지배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단결이 필요하고, 내부의 단결을 위해 외부와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논리가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공히 관통하는 줄기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인종주의는 살아남고 이겨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강하고 잘사는 백인/서양인에 대한 열등감과 우리보다 약하고 못사는 비백인에 대한 우월감이 동시에 얹혀있는 집단적인 인종주의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출처: 문강현중 “인종주의와의 진짜 싸움”)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착각

한국 사회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에 대한 자각이 극히 약하다. 공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다루이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행정과 권력 행사에서도 무감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주류 언론과 사회 지도층이 인종차별 발언과 표현을 해도 문제되지 않고 덮여진다. 또한 반복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착각이 작용한다.

- **인종주의는 지나간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또는 현대사회에서 인종 문제로 차별이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 인종주의는 새로운 모습으로 기존의 차별구조와 결합해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다.
- **인종주의는 스킨헤드나 네오나치, KKK단과 같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이나 갖는 생각이지 아시아나 한국과는 관련이 없다.** ⇨ 기존의 불평등 구조와 차별 구조가 서구 추종 개발모델과 백인 숭배문화가 만나면서 인종차별로 발전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 **민주주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사회의 선량한 시민들과 인종주의는 무관하다.** ⇨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식도 이주민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류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용되면서도 비주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교육, 이주민 관련법을 통해서 인종주의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제도적 인종차별이란?

제도적 인종차별

정부, 법원, 경찰, 기업, 노조, 학교, 종교기구 등의 정책이나 관행 또는 제도에서, ‘인종’ 표식에 따라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하거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방지하는 것.

정부는 2008년 12월, 최초의 국가계획인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기본방향은 전문인력 등 우수인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지만 단순기능인력은 필요에 맞추어 도입하되 일정기간 이상 살지 못하게 하며, 동포는 사회통합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입국 및 취업에서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 외국인, 우수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 개방 정책을 취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 동포 방문취업제도(H2)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9, H2 비자 소지자는 4년 10개월의 체류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반 영주권 신청자격 중 하나인 국내 합법 체류 5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 세계의 부와 지식생산이 북반부, 서구 중심으로 편재된 상태에서 이런 방침은 국가 간 경제 발전 상태를 위계화 하는 것이며, 인종차별이자 계급차별이다.

<한겨레신문> 2011. 4.13 12면 기사 일부

한편,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차우기본법> 제2조 1항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자는 재한 ‘외국인’ 에도 해당되지 않고 한국인도 아니므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다.

한국은 국적 부여에 있어서 혈통주의를 표방하는 속인주의 국가이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부모의 국적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여타의 사정으로 부모의 나라에 출생신고를 하기 힘든 경우에 그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고 만다.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타파(가명)와 체룻(가명) 부부는 모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06년과 지난해 각각 한국에 와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결혼해 지난날 6일 경기도 안산에서 남자 아이 미첼(가명)을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한 달이 넘도록 국적도, 공식적인 출생기록도 없다.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 정책 탓에 출생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에 가서 출생 등록을 하면 해당국적을 얻게 되지만 미첼의 부모는 모두 난민이라서 콩고 대사관을 찾아가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국내 난민(신청자 395명)을 조사해 보니, 난민(신청자) 자녀의 24.4%만 자국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했고 나머지는 출생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이는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 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어긋난다.

※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의 목소리

■ "지하철에서 사람이 약간 쳐다봐도 내가 예민해졌어요. 외국생활 많이 해봤는데, 한국에 와서 동물처럼 됐잖아요. 내가 혼자 지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다 나한테 오거든요.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말 그대로 눈보고 말하는 거 되게 어렵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 시선 다 나한테 와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되게 예민해졌어요. 나는 처음에 그래서, 거울 앞에서도 스스로 연습하면서 제가 이상한지도 확인을 하면서 ..." (스리랑카 결혼이주여성, 한국 10년 거주)

■ "...임금차이가 나고, 일하는 데 말투도 차이가 나고, 욕도 많이 하고, 한국인한테 안 그러는데 외국인한테만..." (네팔 미등록이주노동자, 한국 15년 거주)

■ "뭐 월급은 당연히 다르지만, 퇴직금도 없고, 보너스도 한국사람한테는 있고, 외국사람들한테는 없고..." (네팔 결혼이주남성, 16년 거주)

■ "제가 작년에 아는 미국인이 비자 기한 넘어갔어요.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근데 출입국 갔어요. 해줬어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이라면, 칼처럼 똑바로 한다면 그 미국인도 불법체류자되고 빨리 잡아서 보내야 하는데,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안그리고, 제도적 차별이죠." (버마 난민, 한국 16년 거주)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식도 이주민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류 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용되면서도 비주류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교육, 이주민 관련법을 통해서 인종주의가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성·인종차별

2009년 한 인도인 남성과 동행하던 한국여성이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인종적, 성차별적 폭언을 당했다. 그 때의 “더러운 X, 왜 외국X 만나고 다니느냐”는 폭언은,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된 외국인 남성에게 대한 인종주의적 비하만 담은 것이 아니라 그런 ‘열등한 남성’이 ‘우리의 여성’을 훔치고 있다는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비슷한 태도를 피해자에게 보였다. 이러한 공격이나 대우는 백인 남성과 동행하는 한국 여성에게는 별로 가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집단’이라는 인종주의적으로 규정한 시선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런 태도가 허용되면 국가권력이 이주민들을 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 예로, 탈법적인 방식으로 미등록체류자들을 대규모로 검거한 것과 이를 사회적으로 침묵하고 합리화했던 2010년 한국사회가 그렇다.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에서 인종주의란?

한국 사회에서도 인종주의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다. 한국은 이미 2007년 8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배우자,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도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시민들 또한 다문화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며 인종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보낸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다문화주의에는 사회 안의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 이에 따른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문화를 더 풍부하게 하려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은 없고 그저 다문화주의에 대한 찬양만 공허하게 울리고 있다. 관 주도의 정책들,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다문화주의 논리, 타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만을 강요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지향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은 기존의 인종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고민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단일 민족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문화에 대해 경계심과 배타성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개방 물결에 갑자기 물려온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에 한국인들은 당황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종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과 고민 없이 다문화의 가치를 찬양하는 방향으로 돌변했다.

이런 기반이 한국인의 의식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정부의 정책에도 드러나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인종주의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읽고 다문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인종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배해온 의식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분석 그리고 다름에 대한 포용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출처: 박경태 [인종주의])

※ 다문화 정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차별 예시

예 시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정의에 보면 다문화가족은 오로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입양된 아이들(재혼으로 인한)이다. 이는 철저히 혈연중심의 사고로서 제도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법적 근거로서 그로 인해 미등록 이주이동의 경우는 교육권의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임에도 단속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기에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예 시 2) 사회통합이수제는 결혼이주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사회문화를 일방적이며 강제적으로 배우고 흡수하도록하는 동화주의 정책으로서, 결혼이주자들로부터 유입되는 다문화의 상호교류가 아니다. 이는 철저히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한 국가 출신들에 대한 우월주의 국가관이다. 귀화 시 하게 되는 충성서약 각서 또한 이주민에게만 요구하는 차별이라 할 수 있다.

3부 | 성·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함께 걸음

일상의 성·인종차별 알아보기: 이를 위한 질문

당신은

출입국시 공항 · 출입국사무소 · 비자관련 기관 · 구청, 동사무소 · 정부 행정기관 · 경찰서, 경찰관 · 직장, 학교, 자녀의 학교 · 정당 활동 · 병원, 약국 · 슈퍼, 식당 · 미장원, 대리점 · 종교기관 · 버스, 지하철, 기차, 길거리 · 방송, 영화, 신문 · 잡지, 광고 등

에서 / 으로부터

피부색 · 성별 · 언어(한국어) · 발음/목소리 · 냄새 · 시선 · 종교 · 출신 국가 · 출신 민족 · 출신국의 빈곤 · 청결 · 문화적 기호 · 체류 자격 · 동반자 · 합석 여부 · 응대 여부

와 관련되거나 이를 언급하는 부당한 대우
또는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인종차별은 어떻게 금지되나?



영국의 경우

인종관계법이 있어 인종적 이유로 가해진 직접적 간접적 차별을 모두 불법화하고 있다. 여기서 인종적 이유라는 것은 인종, 피부색, 국적(시민권 포함) 또는 인종적 민족적 출신이라는 이유를 의미한다. 인종관계법은 고용, 교육, 주거, 재화, 시설, 용역의 제공, 그리고 나아가 공공기관들의 모든 업무 수행에서의 인종차별을 불법화하고 있다. 또 특별한 인종차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주거, 교육, 공공기관 업무 수행 등 개별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행위 준칙은 일련의 권장사항과 지침들인데, 인종 평등의 표준과 평등한 인종관계를 추구하는 실천적 지침까지 포함하고 있다.

인종관계법에 의거하여 출범한 인종평등위원회(CRE)는 인종차별의 제거를 지향하고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며, 다른 인종, 민족 배경을 가진 출신 사람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장려하며, 인종관계법이 기능하는 방식을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인종평등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인종평등을 단속할 권한을 갖

지 않지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인종관계법에 의하여 가능한 차별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고 그 정책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호주의 경우

호주에서도 1975년에 제정된 인종차별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이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인종차별을 불법화한다. 인종차별법은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내지 민족 출신, 이민자의 지위, 특정 민족성을 가지거나 기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친척 또는 동료라는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인종차별법은 사업, 학교, 지방자치단체, 주 및 준주의 정부기관과 부서, 그리고 영연방 정부기관과 부서를 포함하여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인종차별법은 고용, 숙박시설의 임대차 또는 부동산의 매도, 교육,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공공에 의하여 이용되는 목적의 장소 및 시설에의 접근, 노동조합회원 등의 영역에서 적용된다.

또 1995년 도입된 인종혐오법(Racial Hatred Act)은 인종에 기초한 공격적 행태를 불법화함으로써 인종차별법을 보완한다. 즉 인종혐오법은 인종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욕설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종차별법의 보호범위를 확장하였다.

인종혐오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는 곳에서, 또는 일반 공중이 방문하거나 접근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단순한 경멸 이상으로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위협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인종혐오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인종적으로 공격적인 행태의 목표가 된 경우 일차적으로 그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기구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인종적, 민족적, 국적 그룹을 대표하는 기구의 지원을 요청한다. 또 인권 및 평등기회 위원회(HREOC)에 제소할 수 있다.

인권 및 평등기회 위원회에서는 당해 고소가 인종차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여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밟는다. 만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연방법원 또는 연방간이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종차별위원회는 인권 및 평등기회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인종주의와 투쟁하는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증진하고, 연방 인종차별법 및 인종혐오법의 인식 및 준수를 촉진하고, 필요시 인종차별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있어서 연방법원 또는 연방경범죄법원의 업무를 지원할 책

임을 진다.

유럽연합의 경우

1984년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하자, 유럽의회에서 먼저 인종주의의 발호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의 에브리게니스 보고서, 1986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반대하는 이사회·의회·위원회 합동선언, 1989년 유럽공동체 사회현장, 1990년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맞선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 1991년 포드 보고서 등으로 정책강화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 결과 인종차별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을 포기하고 유럽공동체협약을 개정하여 인종이나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유럽공동체에 부여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인종주의의 초국적 전개, 둘째, 유럽연합의 이민·난민정책의 부작용, 셋째, 유럽연합에서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로비의 등장이다.

1994년 5월 설치된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이른바 “칸 위원회”)가 1995년 봄에 발간한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1999년 암스테르담 협약에서 인종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유럽연합에 부여하는 두 조문을 신설하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신설된 유럽공동체협약 제13조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2000년 6월에 합의된 유럽이사회의 <인종평등지침>이다.

이 지침은 “각국 내에서 평등대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종이나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을 목적으로 가지며, 아래에 규정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표준 및 행동지침으로 정립되었다.

2. (a) 직접적 차별이란 인종이나 출신민족을 이유로 비근한 상황의 다른 사람이 받거나 받았거나 받았을 대우에 비하여 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인정되고,
(b) 간접적 차별이란 외견상으로는 중립적인 규정, 기준, 관행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민족의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비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인정되며...
3. 희롱[괴롭힘]이란 인종이나 출신민족과 관련한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모멸적, 굴욕적, 억압적 분위기를 조장할 의도를 가졌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가?

국 내외 인권법과 제도 및 의식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종주의를 퇴치하는 길은 아직 멀게 남아있다. 인종주의가 그 모습을 달리하며 제도와 문화, 시장과 일상생활에 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같은 비서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각 사회의 기존 차별구조에 기댄 토착화된 인종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 알리기

무엇보다 주변의 인종차별, 성·인종차별의 사례와 이야기가 더 자주, 더 분명히 알려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알리기, 기고, 보도가 필요하다.

■ 인권단체와 언론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인권단체와 언론에서 이러한 현실을 인종주의, 성·인종차별의 문제로 적극 제기하고, 사건을 접수하여 대응하며, 인종주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설명하며,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성·인종차별 등 중첩된 차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조사

연구·조사 기관에서는 성·인종차별과 같이 인종주의와 중첩된 차별에 대한 특별한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파악과 대안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인종차별 금지법과 이와 관련된 제도화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차별금지법 내부에 또는 별도로 인종차별 금지와 처벌이 법제화되어야 하며, 이에 맞춰 공공기관, 법집행기관의 제도적 문화적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 법집행기관과 언론기관에 대한 인종주의와 관련된 교육

인종차별에 관한 법집행기관과 언론기관의 태도는 심각하게 낙후한 수준이다. 인종주의 감수성과 인권적 대비, 제도적 운영을 위해 이들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인종주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 공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인종차별문제를 포함하는 인권교육

국가적으로 전 생애단계에 걸쳐서 시행되어야 하는 인권교육은 현재로 불충분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인종차별 문제는 외면되고 있다. 공교육과 사회교육에서 성·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인종’ 기호 집단의 주류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

차별철폐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는 당사자들을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종’이라는 기호로 집단화된 사람들이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방면에서의 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때 인종차별 철폐의 길이 열린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꼭 알아야 할 것

더반 선언문 및 행동 프로그램, 국가인권위, 200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위, 2010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 2008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 2008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라잡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

■ 더 알아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성·인종차별 조사와 인식 개선 사업 결과 발표회 자료집, 2010

"뿌리내린 성·인종차별"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자료집, 2010

"한국사회 성·인종차별을 고발한다"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대구지역 토론회 자료집, 2010

"나 이제 할 말 있다"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자료집, 2009

"열린 워크숍: 성·인종차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자료집, 2009

위 자료들은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에서 발행한 자료들로 jacargd@googlegroups.com 로 문의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2010

다문화 사회와 헌법, 2010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사건 결정례집, 2009
 고용허가제 시행5년,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2009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200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쟁점 토론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 2008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 -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
 색 :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
 이주와 인권 국제 포럼 자료집, 2006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2005
 외국 차별금지법령집, 2004
 위 자료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자료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
library.humanrigh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부하기

강신주, 2004, <<나는 튀기가 좋다>>, 금토
 마크 칼레스니코, 2010, <<우편주문신부>>, 문형란 옮김, 씨네21
 박경태, 2009, <<인종주의>>, 책세상
 박노자, 2003, <<하얀가면의 제국>>, 한겨레신문사
 아바르티아 센, 2010, <<정체성과 폭력>>, 이상환, 김지현 옮김, 바이북스
 안연선, 2004,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줄리어스 레스터, 2007, <<인종 이야기를 해볼
 까?>>, 조소정 옮김, 사계절

에드워드 사이드, 2003,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교보문고
 에드워드 사이드, 2002,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 정정호 옮김, 도서출판 창
 이옥순, 2003,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이창래, <<영원한 이방인>>, 정영목 번역, 나무의 숲
 일레인김 외, 2002, <<위험한 여성>>, 삼인
 장태환, 2004, <<아시안 아메리칸-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찰스 W. 밀스, 2006, <<인종계약 근대를 보는 또 하나의 시선>>, 아침이슬
 카롤린 필립스, 2009, <<커피우유와 소보루빵>>, 푸른숲
 캐서린 H.S 문, 2002, <<동맹속의 섹스>>, 삼인
 토니모리슨, 2007, <<술라>>신진범, 들녘
 토니모리슨, 2007, <<타르 베이비>>, 김애주, 들녘
 토니모리슨, 1993, <<푸른 눈동자>>, 신현철옮김, 출판사 눈
 프란츠 파농, 2003, <<검은피부 하얀가면>>, 이석호 옮김, 인간사랑
 프란츠 파농, 2004,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남경태 옮김, 그린비
 한국서양사학회 편, 2002,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지식산업사

■ 함께 하기, 글쓰기, 말하기, 돕기

다문화가족협회
 KASAMMA KO(필리핀이주공동체) www.kasammako.prophp.org
 버마공동행동Burma Action Korea cafe.daum.net/mmwec
 재한인도네시아공동체Indonesian Community in Korea: www.tkikorea.com
 이주노동자노동조합 02-2285-6068 migrant.nodong.net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02-776-0416 www.mwv.or.kr

The HanFil Association(한-필결혼이주자협회) chungnamhanfil.bravejournal.com

Teresa Women Migrants 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534214807

■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과 함께하는 모임들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02-2699-994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02-3675-7740 <http://www.kpil.org>

국제민주연대 02-736-5808 <http://www.khis.or.kr>

난민인권센터 02-712-0620 <http://www.nancen.org>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2011-1824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02-3672-9472 <http://withmigrants.org/xe>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80 <http://www.suwonhotline.or.kr>

아시아의 친구들 031-921-7880 <http://www.foa2002.or.kr>

안산이주민센터 031-492-8785 <http://www.migrant.or.kr>

언니네트워크 02-3141-9069 <http://www.unninet.net>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02-747-5831 jcmk@chol.com

인천여성의전화 032-527-0990 <http://www.hotline21.or.kr>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http://www.wmigrant.org>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후원 : 우리은행 1002-840-197843 이대훈

성 · 인종차별반대 공동행동의 취지(2009년 7월 27일)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이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행동 및 공격이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이주자들은 취약한 한국 내 지위 때문에 이러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 작은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주자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출신국의 경제적 상황, 출신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피부색,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직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이주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신분과 계급, 백인-서구 숭배 등 세계를 우열관계로 보는 다양한 차별의식이 인종주의와 결합될 때 얼마나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공격은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이나 연구자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부천의 한 버스에서 한 한국인이 인도인과 같이 동행한 한국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었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경찰서에서 역시 이들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반인권적이고 혐오스러운 차별이념의 하나인 인종주의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았고 그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이 큰 반면, 이에 대한 각성이나 공론화, 경찰 등 인권관련 기관의 의식이나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사건에서처럼 인종주의는 성차별, 가부장적 가치와 결합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역시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소위 ‘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소위 ‘백인’과 함께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소위 ‘노동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외국인혐오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차별이 인종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이주자에 대한 인종 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문제가 제대로 가시화, 공론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반성적 성찰을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도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겪은 사건은 숨겨져 있는 커다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쉽게 도움이나 관심을 촉구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좀 뒤늦은 느낌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시민사회 내에서 중요한 의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록 | 2001년 더반 선언문 및 행동계획 요약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 :
각국 정부의 공식 동의로 합의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행동 프로그램

이 행동프로그램은 더반 선언(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선언)의 목적을 지향하며, 정부, 비정부기구, 민간기업과 국제기구들에 대한 219가지의 권고를 담고 있다.

인종주의의 피해자

행동프로그램은 인종주의의 표적이 되는 대상을 다음 집단들로 정의한다.

-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사람들
- 선주민
- 이주민
- 난민
- 기타 피해자들: 인신매매의 피해자, 루마니아/집시/신티/유랑민, 아시아계 사람들,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및 언어적 소수집단, 여성과 소녀들, 어린이, 장애인과 에이즈 감염인

선주민

각국은 선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인종주의를 식별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법을 검토하고, 선주민과 체결한 조약을 존중하고, 그들의 제도를 지지하고, 인종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이러한 조치들

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촉진하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주민 대표와 협의하며, 도시화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주민

행동프로그램이 이주민에 대하여 각국에 촉구하는 내용은 이주민에 대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처, 인권 모니터링 및 보호, 이주민의 공헌에 대한 홍보, 가족 재결합 촉진, 고용 장벽 및 직장 내 차별 해소, 조화와 관용 촉구, 이주와 관련된 법이 인권에 부합하는지 검토, 문화 다양성 및 통합 촉진, 구금된 이주민의 권리 보호, 경찰과 출입국 관리직원들의 적절한 대우, 해외 자격증의 인정,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보호,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 동등한 경제적 기회 및 책임에 대한 인정, 보건, 교육 및 주거 등 적절한 사회 보장 제공 등이다.

난민

각국은 난민에 대한 국제 의무를 따르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에 대응하고,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민족, 종교 및 언어 소수자

행동프로그램은 매우 넓은 범위의 집단과 환경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 루마니아, 짐시, 신타 및 유랑민에 대한 특수한 행동 외에도, 프로그램이 각국에 촉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신분을 증명할 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민족과 종교, 언어적 소수집단의 인권 보호, 소수집단의 고용 및 주거, 보건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동등한 대우, 소수집단 중 여성의 권리와 의사결정에의 참여에 대한 강조, 경제·사회적 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 여성과 소녀에 대한 임파워링, 전쟁 무기로 이용되는 성폭력과 인간성에 반한 여타 범죄에 대한 대응, 인종차별로부터 아동의 보호,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공, 남성과 여성에게 국적에 대한 동일한 권리 보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 등이다.

인종주의 퇴치를 위한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의 예방, 교육 및 보호

행동프로그램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제휴하는 것을 비롯하여 시민들과 기관들이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각국에 요구한다. 그리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젠더 관점의 주류화,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 국가 프로그램의 채택, 정치·법적 제도의 문화적 다양성 반영 검토,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종주의에 대처, 관광 산업과 인터넷 제공업체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을 개발할 것을 권장,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고 이들 여성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 국가 차원

1. 입법, 사법, 규제, 행정 및 기타 조치들

이 장에서는 인종주의에 대처하는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촉구한다. 행동프로그램은 각국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 문제, 공공 생활에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인신매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평등, 경찰과 다른 법 집행관의 위법 행위,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적 법집행,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유전학적 연구의 사용, 경찰 구성의 다양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도록 제안하며 인종주의적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제 문서의 비준과 효과적인 이행

행동프로그램은 13개의 국제 문서를 열거하고 각국 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를 비준하고 동의할 것, 그리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인종주의적 행위 가해자의 처벌

행동프로그램은 각국이 인종주의적 동기에 의한 범죄에 단호히 맞서 그러한 동기를

형량 선고에 있어 가장 요인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인종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신파시즘, 폭력적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단을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범죄화하고, 인종주의적 불법행위를 기소하고 형사 재판 체계 내의 담당자들이 법의 공정하고 공평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독립적 전문 국가인권기구와 조정제도

각국 정부는 특히 인종주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를 설치, 강화, 심의하고,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재정적 자원, 권한 및 조사 연구교육홍보를 위한 역량과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정책과 관행

자료수집과 분석, 조사와 연구

행동프로그램은 각국에 주변화된 집단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배포 및 발간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정보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의 사회경제적 개발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건강과 건강상태, 신생아와 산모 사망률, 수명, 문자해독률, 교육, 고용, 주거, 토지소유, 정신 및 육체적 의료보호, 물, 위생, 에너지, 통신 서비스, 빈곤과 평균가처분소득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의 원인과 현상 둘 다 효과적으로 다루는 이주의 모든 과정과 양상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행동지향적 정책과 계획

행동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에 대한 다양성, 평등, 형평성, 사회 정의, 기회의 균등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이 정교한 국가적 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장려한다. 이 계획들은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차별 없는 바탕에서 모든

생활 분야의 시민적 권리 및 문화경제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각국은 통계정보를 근거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

행동프로그램은 직장 내의 시민권 시행, 공공교육 및 의사소통 등 다방면의 전략을 통해 차별 없는 직장을 실현하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국, 비정부기구 및 민간기업은 취약한 지역에서 사업을 촉진하고, 숙련적 고용을 포함하여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 재취업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의 전망을 개선하여야 한다.

건강, 환경

행동프로그램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결과로서 초래될 수 있는 건강 상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최고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을 강화하도록 각국에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 비정부기구와 민간기업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은 사람들을 위한 기초의료보호와 같이 비용부담이 적은 종합적인 양질의 의료보호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취약 지역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다양한 보건 인력의 훈련을 촉진하며, 의료보호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잠재성을 기준으로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모든 집단의 남녀를 채용하고 유지함으로써 보건 업종에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사결정에 동등한 참여

각국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특히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이 모든 단계와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이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 부문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인과 정당의 역할

정치인과 정당은 인종주의에 맞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인과 정당은 위반사항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를 포함하는 자발적인 행동 규정을 개발하여 구성원들이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장려하거나 선동하는 공개 발언 및 행동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교육 및 인식 교취 방안

각국은 다른 관련 조직과 협력하여, 반인종주의 교육과 국경 안에 있는 선주민 문화에 대한 인정, 관용, 다양성 및 존중의 가치를 알리는 언론 캠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선주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차별 없는 교육 접근성

각국은 성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취약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 성취를 측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 교육

행동프로그램은 각국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고취하기 위해,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된 공식·비공식적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행할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인권교육과 반인종주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교과서와 커리큘럼을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교육

각국은 학교 교과과정의 인권 프로그램에 차별과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와 다른 교과를 포함한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개선하며 교사들이 반차별과 상호존중, 관용의 원리에 근거한 행동 패턴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훈련받고 적절히 동기를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시민권에 대해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한 활동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3월 21일)'을 기념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활동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권교육

행동프로그램은 법 집행과 관련된 이들을 비롯하여 교정 및 안보기관, 보건, 교육과 이민 관리국, 지방 정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인종주의에 반대하고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인권 교육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촉구한다.

신기술을 포함한 정보, 통신 및 매체

미디어는 인종주의 근절을 위한 긍정적 기여도 하지만,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묘사를 하거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갖고 있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이용한 혐오 발언의 유포, 인종주의적 소제 확산을 주시해야 한다. 행동프로그램은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반영하는 프로그램과 인종주의와 인종적 우월성이라는 관념에 대처하기 위한 자발적인 윤리규범을 요구하고, 미디어와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하고, 그리고 공공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통한 존중과 관용을 촉진하고, 고정관념화를 막고 사람, 사건과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표현을 장려한다. 행동프로그램은 또한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자발적인 행동규범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인터넷에 유포되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대처하는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의 불균형도 언급되고 있다.

B. 국제적 차원

행동프로그램은 매우 넓은 범위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국제적 차원에 대한 다양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 요약문에는 신지 않았지만,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헌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지점들이 있다.

효과적인 구제, 청구, 시정 조치의 제공

법률적 지원

각국은 인종주의의 피해자들이 정보, 지원, 보호, 치료 및 법률 구제에 대한 완전한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내법과 프로그램

행동프로그램은 각국 정부에 인종차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차원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기관을 통한 구제 및 시정 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분쟁 당사자 간 갈등 해결, 중재, 조정을 위한 새로운 혁신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회복 정책과 프로그램이 권장된다.

구제, 배상 및 보상

각국은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이 국가재판소로부터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평등 실현을 위한 전략

이 장의 많은 부분은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나 UN과 다른 국제체제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다. 각국은 문화적 다양성의 요구를 인식해야 하고, 소수집단의

출신국가나 인종, 문화, 종교와 언어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문자해독률, 보편적 초등교육, 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보건, 모두를 위한 재생산 돌봄과 안전한 식수 접근성 등, 인종차별의 희생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 조건에서의 격차를 없앨 수 있는 사회개발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번역: 이하연)

펴낸 곳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발간일	2011. 4
집필	이대훈, 이하연, 정혜실
검토	위선주, 허오영숙, 더지
표지	
인쇄	한울타리